

【 2016.02.24(수) 강원일보 】

건설 지역업체 참여 협약체

2016. 2. 23.(화)

원주시 · 호반건설 주식회사 · 롯데건설 주식회사



원주시-롯데-호반 공동주택건설 업무협약 원창묵 시장(사진 가운데)과 롯데건설 박창근 상무(사진 왼쪽), 호반건설 김명렬 부사장이 23일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2016.02.24(수) 강원도민일보 】



원주-롯데-호반건설 지역업체 참여 협약 원주시와 롯데건설, 호반건설은 23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정부,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하도급계약 불이행 보상범위 명확해진다

원사업자 손실 부담 크게 줄 듯
“기한내 응답없으면 처리 간주”
자동 인허가제 적용 확대키로

건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원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나 협의 신청에 대해 처리기한(30일) 내 기관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협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도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예로, 행태규제 개선방안, 지방규제개혁 마무리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관련기사 2면

우선 정부는 지역현장 규제예로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사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실손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때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손실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실손보상 범위가 명확해지면 불합리한 보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인허가·협의간주제 확대, 규제개혁 소극행태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동인허가제는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지날 경우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도입된 상태다.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기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자동인허가와 협의간주제 등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4월까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확정·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발굴한 6440건의 지방규제 중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를 서둘러 완료하고 지난 2014년 말 처음 도입한 전국규제지도도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산업지원정책 등 4개 분야를 보강해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공직자 직무태만 등 징계 강화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뉴스 돋보기

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정부가 23일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밝힌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혁의 조기 완료와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행태규제 개선을 양축으로 한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법령 정비 중심의 규제개선을 서둘러 완료하는 동시에 현장 곳곳에 퍼진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바로잡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특히 행태규제 개선방안은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를 거친 규제법령이 실제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 등 4대 원칙과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 인허가제와 협의간 주제 도입 확대다. 자동 인허가제와 협의간 주제는 행정기관이 처리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나

협이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담당 공직자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도 행태규제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의 경우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할

규제법령 정비 가속화 행태규제 개선 '투트랙'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소극 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행정처리에 적극적인 공직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지자체 자체선정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목을 신설하고 인

사혁신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공무원과 기관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감사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는 지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경우 공무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 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인의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 곳으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직종별 노임단가, 간접비 산정기준으로 가능한가?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간접 노무 인력에 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원들의 실지급급여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실비 산정에 있어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는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규정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고,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실지급급여를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간접노무비 산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간접 노무 인력에 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실, 기존에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하던 것은 다툼의 소지가 많아 보상대상 경비항목 모두를 열거함으로써 보상대상의 경비항목이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11. 30. 개정 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으로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결국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개정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가합1776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법원은 실지급급여와 2010. 11. 30. 개정집행기준을 간접비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본 쟁점들은 상급심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고, 발주기관들은 법령상의 무배치자에 한정하여 최소인원만을 산정기준으로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최근 판결 선례 및 상급심의 판결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분쟁단계를 대비하여 현장단계에서부터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자문위원



건설산업 내실화·성장동력 확보 총력

건협 58회 定總... 회장 임기, 4년 단임으로 변경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건설산업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한 회장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 단임으로 변경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의 건'과 '정관 변경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올해 사업계획은 건설산업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공정시장 환경조성 △생산체계 혁신 △수요창출 및 신사업 발굴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충을 제시했다.

건협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

제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기관의 부조리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토대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건설산업 구조 혁신과 건설수요 창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벌인다.

이들 사업을 위한 2016회계연도 예산 194억여원과 건설산업 정상화 특별회계예산 10억원도 이날 총회에서 확정했다.

건협은 또 이날 총회에서 회장과 시·도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단, 차기 회장에 한해 3년 단임제로 하고 현 시·도회장은 임기를 1년 연장했다. 현 시·도회장 가운데 초임자는 차기 시·도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최삼규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이는 회장과 시·도회장에 대한 회원사 참여기회 확대와 선거과열 해소, 회장과 시·도회장 임기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건설산업이 과거와 같

은 방식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으니 부단하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인들 스스로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석기자 jskim@